

# newsletter

##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제 17호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 발행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http://http://insdv.nk.ac.kr/SSK>

→ 전임 연구원 칼럼

## 표류하는 정착민 : 북한 “유령선”과 감정의 정치

북한 “유령선(ghost ships)”은 서구와 일본 언론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기괴한 뉴스거리이다. 그야말로 기괴하다. 낡은 목선이 난파되어 일본 서해안으로 밀려드는데, 거기에서 가끔 사람의 뼈가 발견되기도 하고, 아사 직전의 어부가 구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발생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처음 보고된 것은 2011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거의 매해 이 “유령선”현상은 주기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유령선”의 목격자인 일본의

어부들은 이 현상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공포와 파라노이아”를 겪기도 한다. 적어도 일본 국내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 한 한국 언론은 “소름 끼치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당연한 것이다. 수평선 너머에서 밀려오는 미지의 물체는 호기심뿐 아니라 공포와 혐오도 자아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감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한 해 난파 사고의 횟수가 100회를 넘었던 2017년에 영국의 비비씨(BBC) 뉴스는 “유





령선” 어부들은 단순히 조난 당한 것일 뿐, 그들에게 다른 정치·군사적인 의도는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들을 스파이라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가령 일본의 납북자 문제 연구단체의 대표라는 한 인물은 알자지라(Al Jazeera)의 아시아 관련 집중 보도 프로그램인 “아시아 101”에 출연하여 “유령선”이 스파이 선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일본인들의 “납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 1970~80년대 북한에 의해 일본인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곤 했다. 북한이 명백히 잘못된 사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측에서 피해를 과장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단순 실종자들을 납북 피해자로 분류하는 일이 매우 잦은데, 예를 들어 지난 7월에는 도쿄에서 1980년에 납치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한 남성이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아시아 101”에 출연한 납북자 문제 연구단체의 대표는 1970~19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의 사진과 명단을 꺼내 보였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유령선 현상을 관련지음으로써, 혐오와 공포를 증폭시키려 한 것이었다. 혐오와 공포는 정치적인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용이한 감정들이다. 이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미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안드레이 란코프는 수산물에 북한의 중요한 수출 품목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어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시장) 경쟁 체제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었다.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배들이 조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유령선” 현상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애초에 바다는 북한과 외부세계 사이의 부정적 감정을 표상하는 공간이었다. 가령 한국전쟁 당시 한국 해병대에게 “귀신 잡는 해병대(ghost killer)”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바다를 통해 병력의 침투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를 패러디라도 하려는 듯, 1959년 강원도 수산업 부문 열성자 대회에서 김일성

은 수산업 일꾼들에게 “귀신 잡는” 어부가 되라고 했다. 1년에 300일 이상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바다도 지키라고 말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1968년에는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의 북한 연구자 벤자민 영이 지적했듯, 이 사건은 북미 간의 “분노(fury)”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불안, 공포, 파라노이아, 분노, 그리고 귀신이 드나드는 공간. 바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교환되는 두려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바다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공간이다. 어부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곳, 그곳이 바다이다.

### 표류하는 정착민

서구 언론은 이 현상을 괴담으로 소비하거나, 일본 해안으로 밀려온 북한어선의 “원시적인(primitive)” 수준을 조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즈음에서 우리는 북한 어민들의 생활과 바다와 관련된 마음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어민들은 스파이가 아니라 “표류하는 정착민(drifting settlers)”이다. 그들은 북한에 남아 생활하기도 하고, 일본 해안으로 표류하기도 하고(“유령선” 현상), 남한으로 와 다시 어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해류는 국경을 넘나들며 흐르고, 배는 의도치 않게 그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기도 하는 것이다.

남한의 탈북 어민들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아주 흥미로운 경향이 있다. 동해(함경도, 강원도)에서 고기잡이에 종사하던 탈북민은 남한에 와서도 동해나 남해에서 어민이 되지, 서해에 가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현상은 이주(migration)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주민들은 이주 후에도 자신들의 성향, 기질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기술이 있다면, 이주 후에도 그 기술을 계속 이용해서 생활하려고 한다. 결국 이주에도 정주성(定住性)이 있는 것이다. 세계의 디아스포라 집단의 경우에도 드러나듯, 이주민들은 생

활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인종, 종교집단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여행자(traveler)도 아니고, 유목민(nomad)도 아니고 정주민(settler)일 뿐이다. 하지만 강제로 이주하거나, 혹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이주하는 것이다. 신체는 낮은 공간으로 이동하지만, 마음은 그 지역성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서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규제가 강해짐에 따라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대신 북한은 중국 사업자들에게 동해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외화를 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령선”의 출현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한 경쟁은 완화되겠지만, 북의 어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북한에 대해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던 남한의 한 북한문학 연구자는 밤마다 베갯잇을 적셨다고 한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마음은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의 경계 사이에서 표류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표류하는 내 마음은 어째서인지 무겁기만 하다.



김성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 → 연구 성과

최선경. 2020. 북한의 초국경 민족 다시 만들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미디어 재현을 중심으로  
 Sunkyung Choi. "Talking with the Hermit Regime: Remaking a Transborder Nation in North Korea: Media Representation in the Korean Peace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4, 2020, pp. 1376-1397.

최근 북한의 미디어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확장해왔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 동포들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 공식 미디어의 초국경 민족에 대한 재현 분석을 통해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기간에 나타난 재현의 변화에 주목한다. 연구 결과, 북한의 공식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초국경 민족 건설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 즉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병렬되는 혼종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분단과 이산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조선민족'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미디어는 두 가지 충성이 공존하는 중요한 현상이 되었다.



김성경. 2020. 이동하는 북한여성과 원거리 모성: 친밀성의 재구성과 가족의 양가성  
 Sung Kyung Kim. "Mobile North Korean Women and Long-Distance Motherhood: The (Re)Construction of Intimacy and the Ambivalence of Family." *Korean Studies*. Vol 44, 2020, pp. 97-122.

지난 십여 년간 북한여성의 역할은 전통적인 어머니에서 가족의 경제생활을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 변화해왔다.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되는 최악의 경제난에서 북한 주민 대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북한 여성은 장마당의 주요 행위자로서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 지역, 심지어 국경 너머까지도 이동하였다. 북한 여성의 이동성의 증가와 그들의 경제적 실천은 북한 가족에도 변화를 촉발하였다. 이제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에 머무는 북한 여성은 이상적 어머니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이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특히 국경을 넘어 중국 쪽으로 이주를 떠난 북한 어머니들은 송금이나 정기적인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원거리 모성실천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 어머니 상에 다다르고자 한다. 물리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다는 점과 거주 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그녀들의 모성실천의 커다란 한계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어머니들은 원거리 모성실천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머니들은 또 다른 가족을 만들기도 하는데, 접경지역에서 새롭게 만든 가족을 활용하여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부양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만큼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가족은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박세진. “증여와 사회/공동체: 이론적 접합의 모색.”**

『비교문화연구』, 제26권 1호, 2020, pp. 35-97.

인류학적 증여이론에 기생하고 있는 ‘호혜성의 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논문은 증여론과 사회/공동체론 사이의 접합을 재모색하려는 시도를 이룬다. 이른바 ‘호혜적 선물교환’에 인간사회의실존을 체계적으로 귀인시키는 이 꿈은 ‘공동체적 사회’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힌 결과 증여에 대한 편향적·일면적 해석을 제공하는 데 머물게 된다. 이에 반해 논문은 ① 사회와 공동체의 분석적 구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② 인간사회와 인간적 공동체가 가진 고유성의 일단을 파악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③ ‘인류학적 보편사실’로서의 증여를 해명하기 위한 몇 가지 토론 가능한 논점들을 제안한다. 이런저런 ‘이름’을 점유할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도덕적 행위로 발생하는 증여는, 한편으로는 공동체 분화(우리/남)의 작동자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인격적 의존관계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인류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수정. “‘탈북자’에서 ‘사회적 가장’으로: ‘젠더화된 초국적 이주’의 관점에서 살펴 본 영국 거주 북한이주남성들의 이주 경험과 사회 활동의 의미.”**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0권 2호, 2020, pp. 177-213.

이 논문은 영국 거주 북한이주남성들의 이주 경험을 ‘젠더화된 초국적 이주’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주로 남성/가장 주도의 가족이주 형태가 지배적인 뉴몰든 북한이주민커뮤니티에 대한 현장연구에 기반하여, 이곳의 북한이주남성의 이주 경험 및 의미화 양상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주남성들은 재이주를 남성/가장으로서 삶의 위기 극복 및 가족 신분전환 기획으로 의미화하였다. 둘째, 이들은 이주 후 “최소한의 세대주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러한 자기평가와 뉴몰든의장소적 특성은 이들을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이끌었다. 이들의 ‘사회 활동’은 북한의 문화적 요소와 영국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열망이 접합된,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물이자 동시에 가치 있고 존경받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주남성들의 젠더화된 욕망과 초국적 이주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이주민들을 복합적 위치성과 요구(needs), 그리고 열망을 가진 존재로 다시 위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 최선경, “북한주민의 친족과 민족 유대: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4권 1호, 2020, pp. 107-142.

이 글은 북·중 접경지역 북한주민의 이동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친족과 민족 유대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경제난을 기점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단절되었던 북·중 간의 친족 연결은 다시 재개되었고 양편의 이동도 늘어났다. 본 연구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족/민족 유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연고 북한주민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친족과 민족 유대를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현장으로 만들어 갔다. 하지만 중국 체류 기간 북한주민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어긋남을 경험하면서 중국 친척, 조선족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성과 민족 경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연고 북한주민이 수행하는 유연한 행위 주체성은 또 다른 대안 전략과 문화적 실천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함의한다.



## 김성희 “정책의 마음, 문학의 감정: 북한의 수산업 정책과 당성의 문학.”

『통일인문학』, 제82권, 2020, pp. 153-194.

북한 문학은 1950년대 당성의 문학(partisan literature)으로 빠르게 변화해간다. 당성의 문학이란 레닌에 의해 확립되고, 즈다노프에 의해 소련 문학의 성격으로 규정된 종류의 문학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문학이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정책 실현의 도구이다. 북한 문학의 경우,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중반 수산업 정책과 수산업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보면 문학이 어떻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반영했는가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당성의 문학이라는 북한 문학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1954년부터 1966년까지의 수산정책과 문학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세 종류의 자료를 활용했다. 수산업 정책에 대한 정보는 조선 중앙 년감을 통해서 수집하고, 그 정책을 반영한 문학작품은 《조선문학》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세 번째 자료는 김일성의 연설문이다. 김일성의 연설을 보면, 수산업 정책이 어떤 마음과 감정에서 수립되고 실행됐는지 알 수 있다. 1950년대 말, 김일성이 수산업 분야에 대해 느끼던 감정은 불안, 불만, 분노였다. 이러한 마음과 감정은 문학작품에 반영된다. 문학작품이 묘사하는 감정은 성과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공포, 성취의 환희 등이다.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중반 북한 문학의 성격, 정책과 문학의 관계, 그리고 북한 정권이 만들려고 했던 지도자와 인민들 사이의 감정적 연대를 고찰한다.

## → 행사 및 향후 일정

**2020년 정기 콜로키움**

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도 매월 1회씩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9월 18일에는 신한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연구라는 사이버네틱스: 블랙박스과 내부환경”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9월 28일 오후 4시에는 우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채석진 선생님을, 11월 18일 오후 4시에는 탈식민 냉전사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옥창준 선생님을 모시어 콜로키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0년 국제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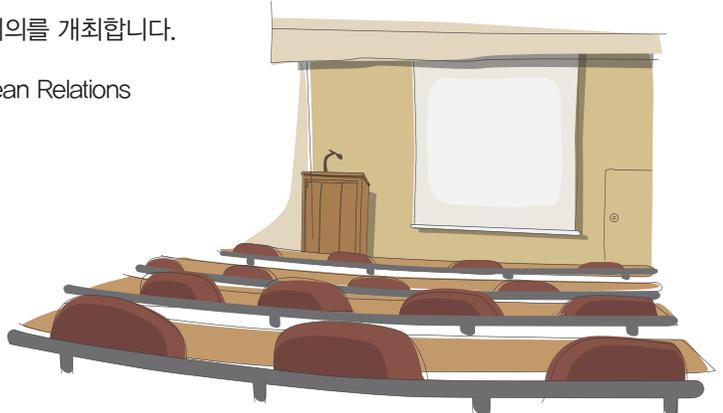
본 연구단에서는 2020년 10월 16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Politics of Emotion in/for Inter-Korean Relations(남북관계 감정의 정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주제** Politics of Emotion in/for Inter-Korean Relations

“인터코리아에서의 감정의 정치”

**일시**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 역사적 상상의 동아시아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의, 『나의 한국사 공부』와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 일주일 정도 일본어 문법을 배운 후 일본책이나 논문을 함께 읽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본어 학습교재는 『강독(講讀)을 위한 일본어』 정도의 제목을 달고 있던, 저자나 출판사도 나와 있지 않은 얇은 책자였던 것 같다. 한자를 배운 세대였기에 일본어의 조사, 부사, 형용사와 동사의 변화를 익히면, 한자와 연결하여 문장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일본어 공부로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일본인 저자들의 이름은 한국식 한자발음으로 읽곤 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궁도박사’(宮嶋博史),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先生)이었다. 미야지마 선생의 ‘조선토지조사업’에 관한 글을 그 시절 읽었는지 그 이후에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80년대 우리’의 기억의 한 켠이다. 누가 왜 무모하게 조차 한 공부방식을 발명했는지 알기란 어렵다. 지식 수입사 연구의 한 공백이다. 한국은 근대(近代)로 가는 길에서 서구에서 생산된 개념어의 번역을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했다. 한국의 개념어는 일본의 번역과 한자의 음역(音譯)을 거친 중역어(重譯語)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제공했던 개념어에 익숙했던 ‘그들’의 주요 수입품목은, ‘맑스·레닌·스탈린주의’와 한국 ‘근현대사’였다. 맑스·레닌·스탈린주의는 사회변혁을 정당화하는 이념이었다. 일본을 ‘경유한’ 맑스·레닌·스탈린주의의 수입이 ‘1980년대식 사고’에 미친 영향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근현대사에서는 사회주의운동과 더불어, 레닌이 1898년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썼을 때의 문제의식처럼, 조선에서의 자본주

의적 발전을 찾고자 했다. 미야지마 선생의 조선토지 조사업 연구는 한국에서 일제의 정책을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토지조사사업과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관계는, 1930년대 일본에서 강좌파(講座派)와 노농파(勞農派)가 일본 사회구성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쟁했던 것처럼, 1980년대-1990년대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사회구성체 논쟁의 구도인 식민지·반(半)봉건·반(半)자본주의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대립을 떠올리게 한다.

## 2.

1930년대 일본의 논쟁이나 1980년대-1990년대의 한국의 논쟁은, 미야지마 선생의 시각에 따르면, 모두 서구적 시각에서 봉건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근대사회는 신분적으로 편성된 사회이고, 신분은 대체로 계급과 일치한다는 것이 전제”다. 그러나 주자학에 기초한 조선이 모범으로 삼은 중국의 송대(宋代) 이후는 신분적으로 편성된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 미야지마 선생의 주장이다.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주자학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제적 지배체제”라면, 유럽의 봉건제는 국가지배의 사적 분할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 맑스의 역사유물론의 도식에 따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과 같은 봉건제의 길을 갔다는 주장이나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모두를 비판하면서 미야지마 선생이 제시하는 대안은 서구식 봉건제가 아닌 동아시아의 ‘소농사회’(小農社會)다.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미야지마 선생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상에 의거해서 조선사회나 동아시아사회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을 비판하기 위한 방법이자 역사상”이다. 양반(兩班)은 토지귀족이 아니었고, 동아시아 특유의 소농사회는 ‘농업생산력’을 제고하는 또한

제고하기 위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학적 이념은 민중을 통치의 객체로만 본다는 점에서 정치적 주체의 형성은 난제였고, 따라서 근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사회에서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도, 동아시아 특유의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과정 때문이라는 것이, 미야지마 선생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중에서 시민에서 시민, 그리고 다중(多衆)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주체의 역동적 호명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야지마 선생이 동아시아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중국중심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미야지마 선생은 역사학의 ‘법칙정립적’(nomothetic) 사고와 ‘개별기술적’(idiosyncratic) 사고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동아시아 특유의 개별기술적 역사기술을 중국을 전범으로 하는 법칙정립적 사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공간을 상정하고 그 속에서 중국에서 원형을 찾는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농업생산력의 변화와 주자학의 이념을 결합한 이중 맑스주의적 역사학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동아시아의 동일성에 대한 과도한 역사적 상상으로 읽히기도 한다.



## 3.

미야지마 선생의 소농사회론은, 사실 전통과 근대라는 서구적 이항대립을 넘어서려는 시도다. 소농사회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전통과 근대로 포착할 수 없을 정도 심대했다는 것이다. 봉건제나 근대와 같은 서구적 개념의 수용과 변용이 소농사회와 소농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장애물이었다는 비판으로도 읽힌다. 미야지마 선생은 소농의 존재와 농업노동자의 부재, 정치적 지배와 토지소유의 유리, 민중의 균질화 등을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근대의 시간을 16세기 이후로 소급하고 있다. 근대는 서구의 충격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정통의 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재적 발전론의 공간적 확장으로도 보인다.

일본의 번역사에서 근대가 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50년대였다. 그 정도로 근대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일본 내부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한편으로 근대는 지옥이고 다른 한편으로 근대는 위대하다는 이른바 ‘근대초극론’(近代超克論)의 동요를 미야지마 선생의 글에서도 읽게 된다. 주자학의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고, 주희(朱熹)의 실천에서 중국적 시민사회를 찾으며, 중국의 명청시대(明清時代)를 탈근대(postmodern)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 등등은 근대의 초극이 보여준 모순을 반복하는 듯하다.

서구적 근대도 전통과 공존한 시대였다. 전통의 발명은 근대국가가 민족을 상상하게끔 하는 기제였다. 근대의 경제적 기초인 자본주의 생산양식도, 국제적, 국내적 수준에서,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본주의적 우클라드를 확대재생산에 활용하곤 했다. 따라서 근대 속의 전통은 근대를 가능하게 한 필수요소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을 근대와 대립시키는 문제설정이 의도하

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서구적 근대를 재해석하면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근대--유교적 근대, 이슬람적 근대, 조선적 근대 등등--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동아시아적 소농사회론은 서구와 다른 근대의 문제설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상상이다. 그렇다면, 근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국가와 자본주의라는 근대의 정치경제적 형태와 다른 근대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대안은 근대를 공허한 공간으로 만들어 시간적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근대는 더 이상 개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근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근대를 대체하는 개념의 발명이 필요하다.

## 4.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을 근거로 작금의 동아시아를 상상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미야지마 선생의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동아시아 소농사회들의 국제관계를 결여하고 있다. 결여는 비판이 아니라 공백을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다. 소농사회론과 동아시아론을 연결하는 매개로 국가형태와 국제관계의 연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역사학과 정치학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다. 시간을 초월한(timeless)한 주류 국제관계이론을 비판할 수 없다면, 이론적으로 동아시아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류의 시각에서는 서구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나 중국과 ‘오랑캐들’의 관계에서나 현재의 국제관계에서나 작동하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상태(anarchy)에서 작동하는 힘의 정치(power politics)다. 만약 힘의 정치가 지배한다면, 새로운 동아시아적 국제질서는 그저 환상일 뿐이다.

중국적 세계질서는 동아시아 소농사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 봉건제에 기초한 서양의 중세가 교황권, 왕권, 영주권 등이 동심원적으로 배치된 질서였다면, 동아시아 소농사회들의 국제관계는,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이념에 기초했고, 위계(hierarchy)는 존재했지만 '오랑캐들'의 정치적 자율성은 확보되는 국제질서였다. 이 질서를 새로운 동아시아를 상상하기 위한 역사적 기초 또는 원형으로 소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동아시아에 수입된 근대 주권국가체제는, 적과 위협을 설정하는 안보담론에 기초하여 냉전체제와 같은 동맹정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적 네트워크가 조밀해지면서, 자본이 주도하고 국가가 동의하며 시민사회가 그 뒤를 잇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같은 '연합적 거버넌스'(confederal governance)를 생각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다. 연합적 거버넌스는 힘의 정치를 국제제도를 통해 통제하는 국제적 수준의 민주화다.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소농사회가 국제질서를, 국제질서가 소농사회를 구조화하는 방식의 실증적 연구를 기초로, 『논어』(論語)에서 군자(君子)의 태도로 묘사한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같아지지는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국제관계의 이념으로 승화하여 근대적 국제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국제관계론을 모색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동아시아적 질서를 상상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고유한 질서를 담은 지역은 지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냉전시대 한반도의 휴전선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을 가르는 분단의 선이었다. 냉전시대에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없었다. 지역은 정치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아시아·태평양, 동북아, 동아시아 등의 지역개념이 서로 경쟁하고 있음이



바로 그 징표다. 이 경쟁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패권국가 미국을 지역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다. 동남아가 포함된 동아시아인가 아닌가도 또 다른 쟁점이다. 동아시아를 논의할 때, 한중일로 한정하면서 북한과 몽골과 대만이 배제되는 것도 지역통합 논의의 한계다.

사회과학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나 북핵문제로 표현되는 동아시아 역내 갈등은, 동아시아 통합의 수요요인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합의 제도화는 낮은 수준이다. 물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과 같은 제도화된 기구도 2011년부터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급요인의 부재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로 '미국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 공동의 '정체성'(identity) 만들기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지역의 형성이 마치 근대초기의 민족형성 및 국가형성과 비슷한 작업이라면, 이 과정의 심리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 정체성이 요구된다. 안중근이나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와 같은 인물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인이 공유

할 수 있는 동아시아를 상상하게 하는 인물과 사상을 찾기 어렵다. 이차대전 이전 동아시아 지식인과 사회운동가의 활동을 다시금 조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재 속에서도 미야지마 선생의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이 역사적 상상의 동아시아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야지마 선생은 또한 일본인 연구자로서 '일본의 동아시아론'을 살피며 동아시아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한국의 동아시아론이 한 지류가 일국적 변혁의 한계를 인식하며 전개될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일본의 동아시아는 다수가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예외가 있다면,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와다 하루끼(和田春樹)나 강상중이 제시하는 동북아 공동의 집 정도다. 일본의 동아시아론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경제의 분리는,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상수로 놓고 동아시아를 상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동아시아론은 가능하면 동아시아의 범위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 광의의 지역으로 설정하려 한다. 제국주의시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유산이 일본이 광의의 동아시아를 설정하게끔 하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야지마 선생은 공리주의적인 동아시아공동체론이나 미국이 포함된 동북아 공동의 집과 같은 동아시아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일본출신의 수리경제학자이면서 맑스경제학에 관한 기념비적 저작(『맑스의 경제학』)을 남긴 모리시마 미찌오(森嶋通夫)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일본의 선택』,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미야지마 선생은 모리시마의 단순 핵심을,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과 북한의 오지(奧地)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미야지마 선생이 정말 주목하는 부분은 동아시아

론을 통한 일본의 '신생'(新生)이다. 혁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국체'(國體)를 유지하게끔 하는 천황제 그리고 일본 내부의 정치와 정치가의 부재를 동아시아를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 모리시마의 핵심 주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와다 하루끼와 강상중을 제외한다면, 북한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의 상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리시마의 현실성과 창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신생을 위해서라도 북핵문제와 북한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의 구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동아시아론자들이 북한을 애써 무시하고 동아시아론을 구상할 때, 동아시아론이 가운데가 텅 빈 도넛이 된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핵문제는 동아시아의 위기이지만, 핵문제는 우리에게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으로 갈 것인가를 묻고 있고 북한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의 공생과 호혜의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상상의 동아시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